

# 쌀 협상 결과와 문제점

## ■ 쌀 협상 과정

- 정부는 구립 12월 30일 WTO사무국에 쌀협상 최종 결과와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결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Country Schedule)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거치기로 함으로써 작년부터 시작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 최종 매듭이 지어짐

## ■ 쌀 협상에 관한 평가

- 이번 쌀 협상의 결과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실익을 얻었다고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관세화유예를 좋은 조건으로 연장하기 위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협상안은 차라리 관세화를 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협상 내용 견해가 갈림
-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과 학계에서도 쌀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의 총체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협상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 쌀 협상 결과(요약)

— 유예기간: 10년(5년 후 중간점검)

□ 저율관세물량(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만 5천 톤에서 매년 균등 증량하여 41만 톤 까지 확대(매년 약 2만여톤 씩 증가)</li> </ul>
□ 수입방식과 수입쌀 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무역방식 유지</li> <li>• 유예 첫 해 수입쌀 중 10%를 시중 판매. 6차 연도에 30%까지 시판비율을 확대한 후 30% 유지</li> </ul>
□ 수입쌀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20만 5천 톤: 국별 쿼터(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 기준)</li> <li>•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 MFN(최혜국대우) 방식의 총량쿼터.</li> </ul>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시 TRQ 증량은 DDA 타결 수준</li> </ul>

## ■ 예상되는 문제점

- 쌀이 소비자에게 시판된다면 국내쌀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더욱이 불법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불법유통과 시장교란으로 엄청난 시장충격이 예상됨
- 정부는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오고 소비감소 추세를 전망하면 2013년 농지는 80만ha가 되어야 하며,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2013년 최소한 국내산 쌀값이 80kg짜리 1가마당 10만~12만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함
- 그런데 2013년 쌀값이 12만원으로 떨어지고 정부의 목표가격이 현행 17만원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투입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임

- 2013년 쌀값이 12만원으로 하락하였을 경우 변동직불제만 감안하더라도 전체 쌀 농가에 1조 9,52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임
  - 전업농 : 5만원 × 80% = 4만원, 4만원 × 420,000ha × 61가마 = 1조 248억원
  - 중소농 : 4만원 × 380,000ha × 61가마 = 9,27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막대한 직접지불제 재정 투입이 예상되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은 불명확한 상태임

-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수준 17만원은 쌀 농가 생산비와 순수익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임
  - 정부가 발표한 목표가격 17만원/80kg은 2001년~2003년 쌀 농가의 평균수익(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 수매 등에 따른 효과)을 감안한

것으로써 최근 3개년의 평균 수익은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10a당 쌀 생산비는 1995년 411,975 원에서 2003년 592,728원으로 매년 상승하여 왔음. 아울러 쌀 순수익은 쌀값과 경영비로 인해 변동하는데, 1995년 324,899원에서 2001년까지 상승하다 2003년 324,575원으로 오히려 하락함. 또한 1995년의 명목 순수익보다 2003년의 명목 순수익이 오히려 떨어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순수익은 훨씬 더 하락할 것임

- 6ha 7만호 육성이라는 개별 농가의 경쟁력이 아니라,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농정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격한 농

업구조개선이 아니라 고령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탈농할 수 있는 완만한 농업구조개선

시도가 필요하며 그 동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직불제와 농촌복지제도가 보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할 것임

- 현실적으로 가구주의 95%가 40세를 넘는 상황에서 퇴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한 우리 농업의 유지 · 발전의 관점에서 직접지불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농연**